

제40회 아이쿱포럼

세계 유기농식품 동향과 아이쿱인증

2016년 4월 14일(목) 오전 11시, 아이쿱생협 한밭센터 교육장(대전 서구 탄방동 735)

프로그램

- ◇ 사전행사: 경영연구동아리 '바람개비' 성과 발표회 / 오전 11시
- ◇ 제40회 아이쿱포럼 <세계 유기농식품 동향과 아이쿱 인증> / 오후 1시 30분
 - 발제
황성구(한경대 교수)
 - 토론
소비자_ 이선경(아이쿱인증센터 회장)
연구자_ 유병덕(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생산자_ 조성규(아이쿱생산자회 회장)
- 문의 및 접수 : 02-2060-1373 / icoop-institute@daum.net

주최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해인
연구동(동)

2016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0주년

제40회 아이쿱포럼

세계 유기농식품 동향과 아이쿱 인증

사전행사 : 경영연구 동아리 ‘바람개비’ 성과 발표회

2016년 4월 14일 (목) 11 ~ 16시

아이쿱생협 한밭센터 교육장

시 간	내 용
11:00~12:20	경영연구 동아리 ‘바람개비’ 성과 발표회
12:20~13:30	점심식사
13:30~13:40	제40회 아이쿱포럼 개회
13:40~14:20	발제_황성구 (한경대 교수) ‘세계 유기농식품 동향과 아이쿱 인증’
14:20~15:10	패널 토론 소비자_이선경 (iCOOP인증센터 회장) 연구자_유병덕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생산자_조성규 (아이쿱생산자회 회장)
15:10~15:25	휴식
15:25~16:10	장중토론 /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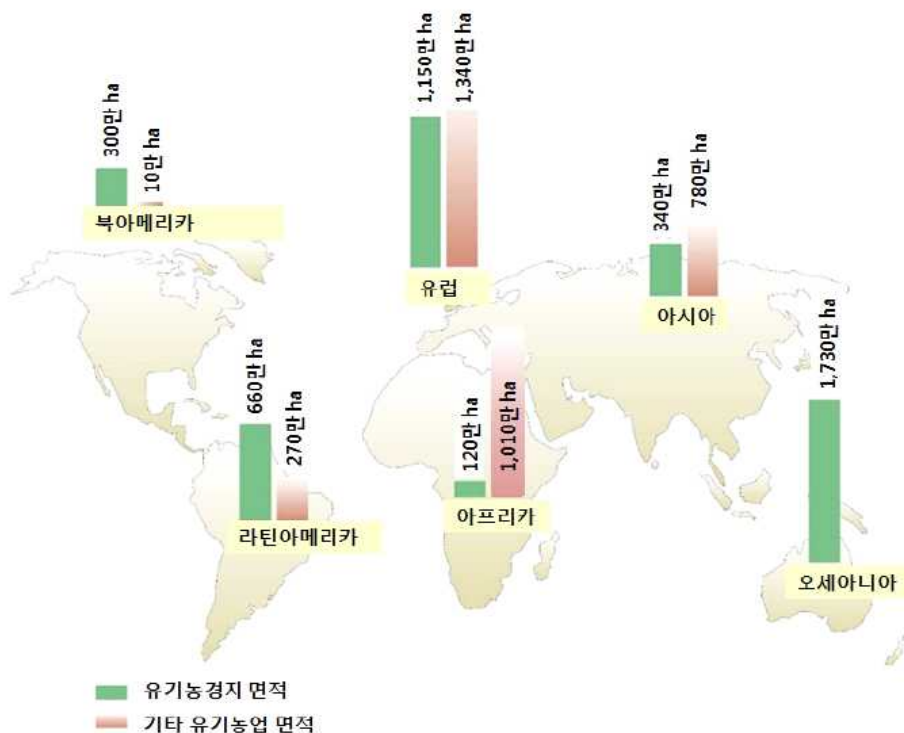
세계유기농식품 동향과 아이쿱인증

황성구(한경대학교 교수)

1. 세계 유기농업의 현황¹⁾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에서는 환경오염 및 잔류 농약 등의 문제로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즉,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유기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세계 유기농업 실천면적 분포(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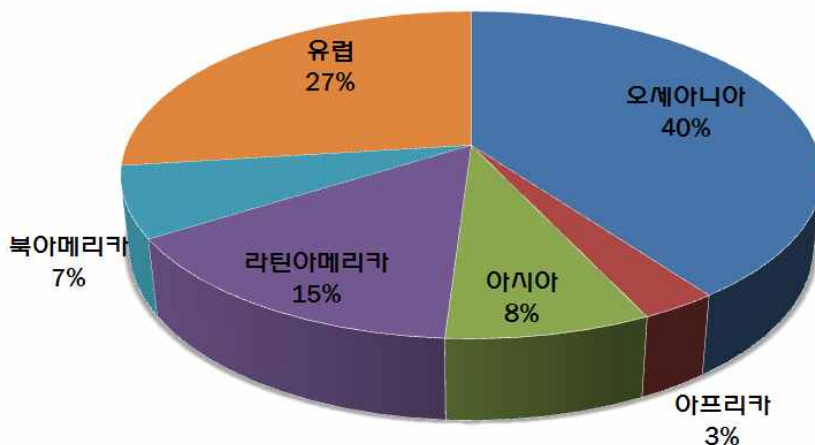
자료: FIBL and IFOAM, 2015,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2015. 8)

세계 유기농업 현황을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약 170개국 7,800만 ha 에서 유기농업을 이행하고 있다. 이 중 유기농경지 4,310만 ha, 기타 유가지역 3,500만 ha로 구성되어 있다.

유기농경지 면적은 2012년 대비 560ha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농경지의 약 1% 수준이나 2002년 이래 매년 20% 정도 증가하여 왔다. 기타 유가지역은 대부분 야생채집의 형태이며, 산림, 양식, 초지 등을 포함한 지역이다.

세계 유기농경지의 분포를 대륙별로 보면, 오세아니아와 유럽이 1,730만 ha와 1,150만 ha로 40%와 27%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두 지역이 전 세계 유기농경지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 라틴아메리카 660만ha, 아시아 340만 ha, 북아메리카 300만 ha, 아프리카 120만 ha 순이며, 기타 유기농업지역은 유럽이 1,340만 ha, 아프리카가 1,010만 ha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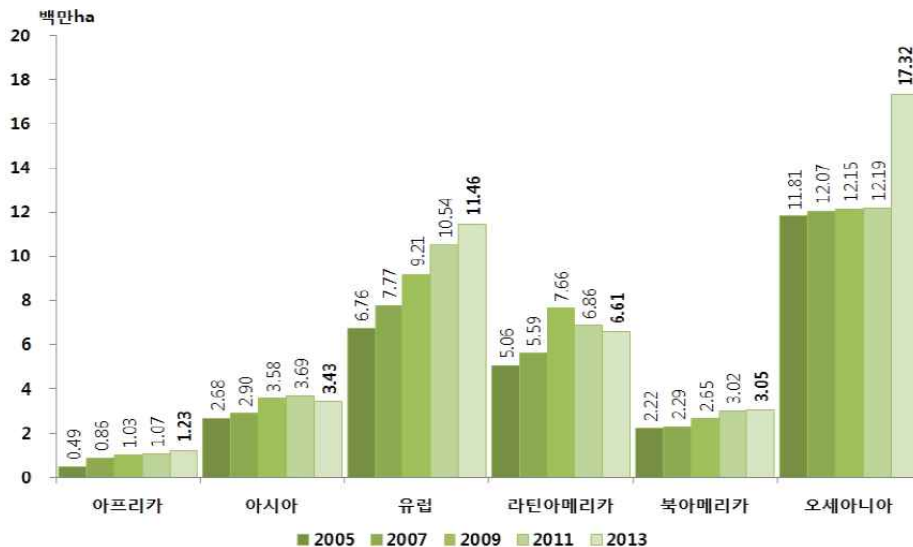


[그림] 세계 유기농업 실천면적 분포(2013)

자료: FIBL and IFOAM, 2015,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대륙별 유기농경지 면적의 변화를 보면, 2013년 기준 면적은 2012년 보다 약 560만 ha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며, 라틴아메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유기농경지 면적이 확대되었다. 특히 호주의 유기농경지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005~2013 대륙별 유기농경지 면적 변화



자료: FIBL and IFOAM, 2015,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국가별로 살펴보면 호주가 1,715만 ha로 가장 넓으며, 아르헨티나 319만 ha, 미국 218만 ha, 중국과 스페인이 각각 209만 ha와 161만 ha 등의 순이다.

농경지 대비 유기농경지의 비중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높은 편으로 포클랜드제도와 리히텐슈타인이 각각 36.3%와 31.0%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에스토니아 등도 15% 이상이다.

2.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규모와 전망²⁾

가. 세계유기농식품의 시장 규모

유기농식품의 시장규모는 1999년 150억 달러에서 2013년 750억 달러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산업투자와 소비가 크게 줄어들어 유기농식품 시장도 소폭 위축되었으나 이후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연평균 8.1%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3년 한 해 동안 748억 1만 6,000 달러의 생산을 기록했다.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같은 기간 각각 7.0%, 13.8%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310억 4,270만, 44억 350만 달러의 생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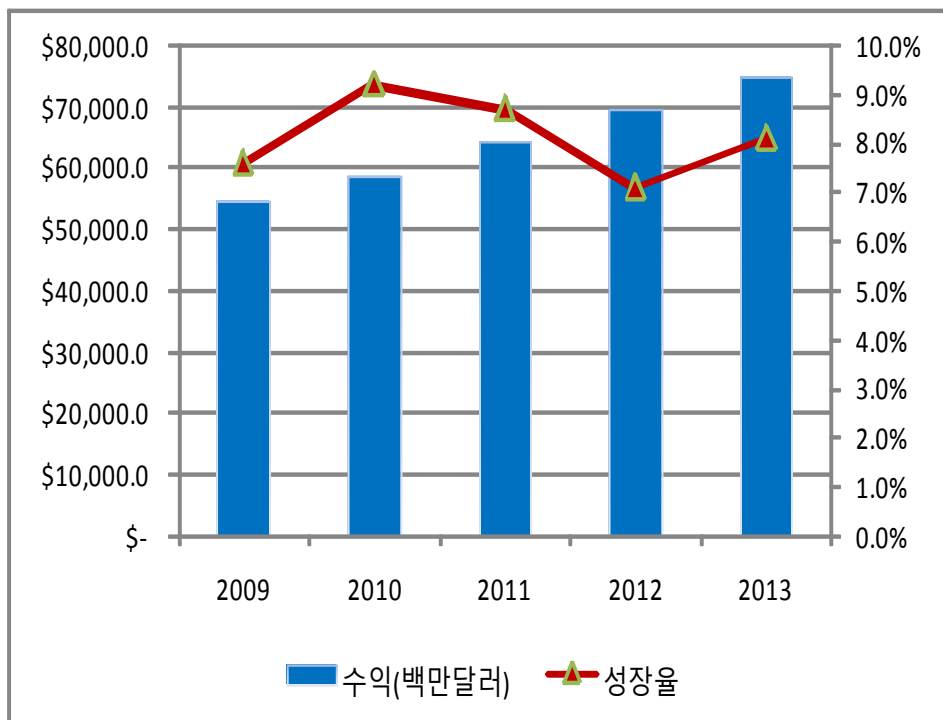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2014

[표] 세계유기농시장의 수익 및 연평균 성장률(2009~2013)

연도	수익(백만달러)	성장률
2009	\$ 54,688.4	7.6%
2010	\$ 58,838.0	9.2%
2011	\$ 64,256.1	8.7%
2012	\$ 69,867.3	7.1%
2013	\$ 74,816.0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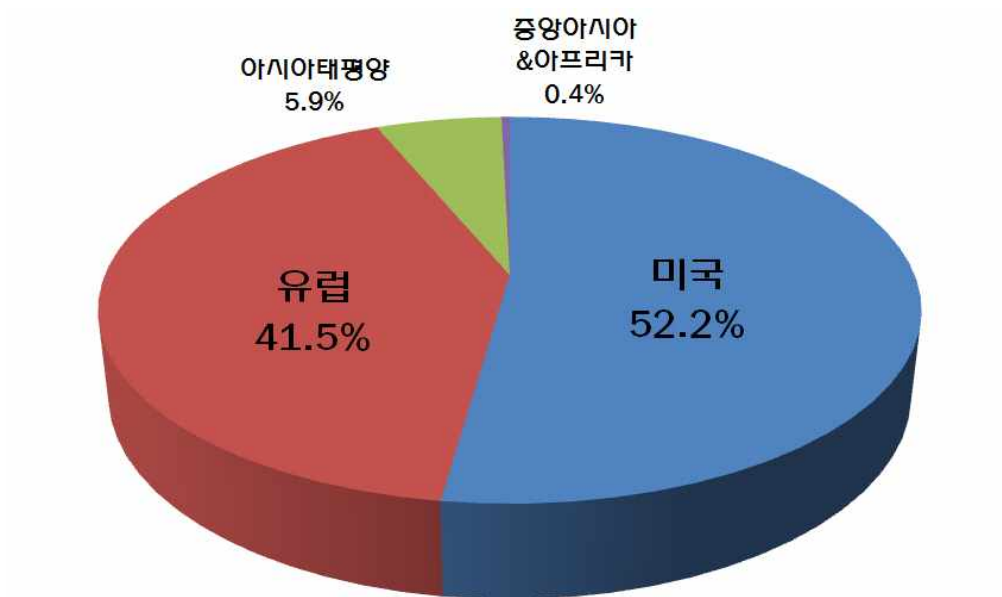
자료: MAKETLINE

[그림] 세계유기농시장의 수익 및 연평균 성장률(2009~2013)



자료: MAKET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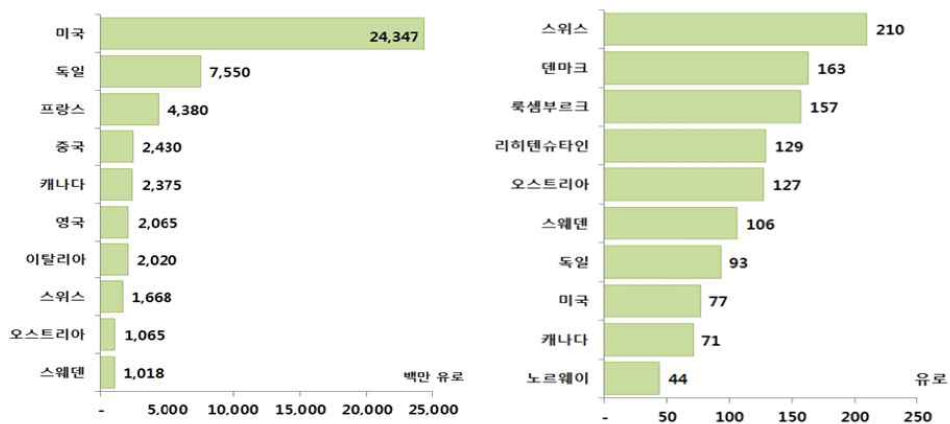
[그림] 세계유기농 시장의 수익별 점유율(2013)



자료: MAKETLINE

[그림] 주요국의 유기농식품 시장규모와 구입비중

〈유기농식품 시장 규모 상위 10개국〉 〈1인당 유기농식품 구입비중 상위 10개국〉



자료: FIBL and IFOAM, 2015,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가장 큰 유기농식품 시장은 미국으로 시장 가치의 5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41.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기농 시장은 미국의 1/10 수준이며,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유기농 시장은 미주 지역의 1/100도 못 미치는 시장 규모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식품의 생산과 소비는 유럽과 북미대륙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유기농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세계유기농식품의 시장 전망

지금까지 유기농식품의 시장규모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3년~2018년까지 세계유기농식품시장이 연평균 5.9% 성장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시장 전체의 규모는 2018년까지 998억 8,16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연평균성장률은 각각 5.3%, 8.0%로 예상되고, 2018년 각각 401억 450만 달러, 64억 6,790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3. 국내친환경농업 현황과 시장전망

가. 국내친환경농업 현황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2009년 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수는 연평균 15.6%, 인증면적은 13.1%, 출하량은 18.9% 감소하였다.

유기농산물의 경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최고치인 16만 8,256톤을 나타내었으나 2013년 이후 감소하였으며, 2014년은 전년대비 19.8% 감소한 9만 5,694톤을 출하하였다.

무농약 농산물은 2010년 103만 9,576톤으로 최대 출하량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저농약 농산물은 2008년 151만 9,070톤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2014년에는 25만 345톤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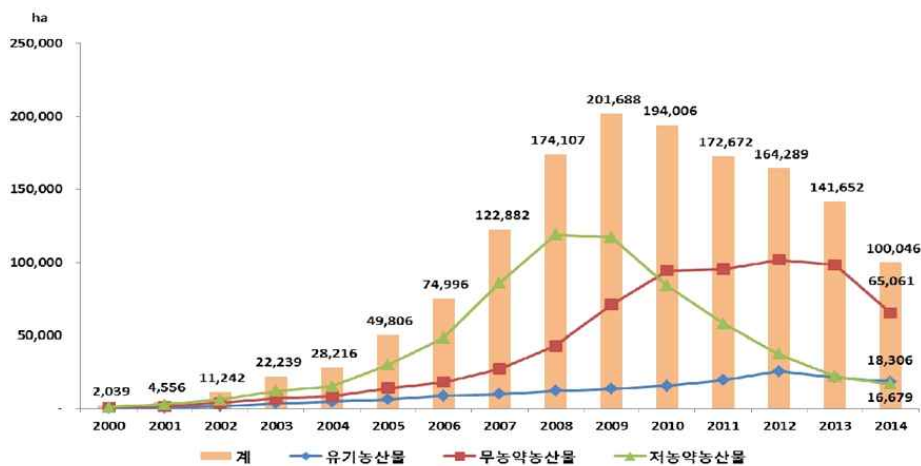
[표]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 추이

구 분		00	09	10	12	13	14
유기	농가수(천호)	0.3	9	11	17	14	12
	재배면적(천ha)	0.3	13	16	25	21	18
	생산량(천톤)	7	109	122	168	119	96
무농약	농가수(천호)	1	64	83	90	90	57
	재배면적(천ha)	0.9	71	95	102	98	65
	생산량(천톤)	16	880	1,040	842	691	479
저농약	농가수(천호)	1	126	90	36	23	17
	재배면적(천ha)	0.9	117	84	37	22	17
	생산량(천톤)	13	1,369	1,054	488	371	250
합계	농가수(천호)	2	199	184	143	127	85
	재배면적(천ha)	2	202	194	164	141	100
	생산량(천톤)	35	2,358	2,216	1,498	1,181	825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인증단계별 변화 또한 유기와 무농약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 2013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저농약은 2009년 이후 계속하여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이는 2010년부터 진행된 저농약인증제도 폐지로 인해 저농약인증 면적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2013년 이후 유기와 무농약 인증 면적의 감소는 친환경인증 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인해 인증 취소 및 포기 농가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2014년을 기준으로 인증단계별 출하현황을 살펴보면, 유기농산물이 11.6%, 무농약농산물이 58.1%, 저농약 농산물이 30.3%를 차지하여 무농약 인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

2014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추정결과 과실류의 유통규모는 약 7,800억 원으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의 3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채소류가 그 다음으로 5,817억 원으로 전체 유통규모의 24%로 파악되었다. 2014년도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총 규모는 2013년 보다 10.5% 감소한 2조 4,2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³⁾

2014년도를 유통단계별로 살펴보면 유기농이 13.0%인 3,156억 원, 무농약이 51.6%인 1조 2,504억 원, 저농약이 35.3%인 8,561억 원으로 나타난다.

[표]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단계별 시장 유통규모(2014)

구분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계
곡류	1,570	3,525	115	5,210
채소류	856	3,290	1,671	5,817
과실류	304	758	6,738	7,800
서류	118	504	25	647
특작기타	308	4,427	12	4,747
계	3,156	12,504	8,561	24,221
비중	13.0	51.6	35.3	100.0

단위: 억 원,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201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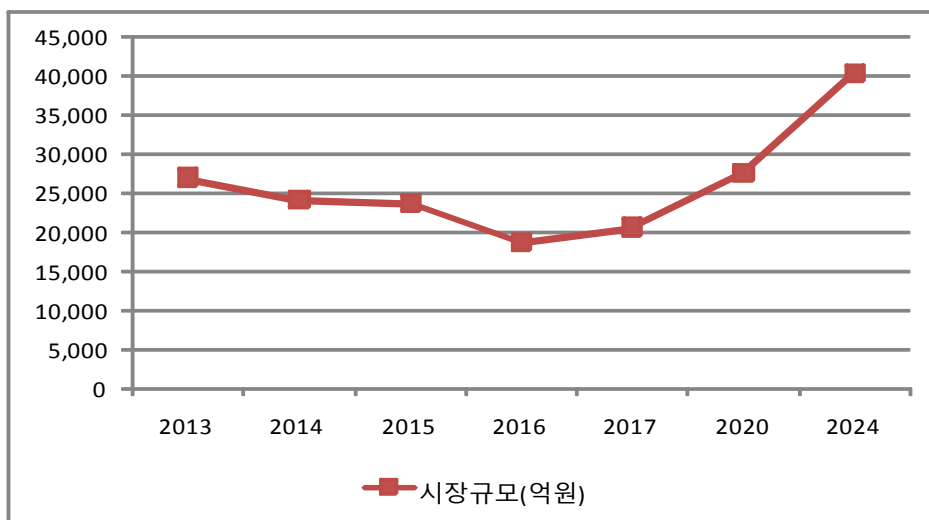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2015. 8)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2016년 저농약 인증제 완전 폐지 등 정책적 변화로 인해 2015년 대비 20.8% 감소한 1조 8,753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기와 무농약이 소폭 증가하는 데 반해 저농약 인증제도의 완전 폐지로 저농약 농산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 국내외 여건과 시장 전망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은 환경보전과 건강한 먹거리 등에 대한 관심증가와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제 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내 친환경식품시장이 2017년 2조 629억 원, 2020년에는 2조 7,618억 원, 2024년에는 4조 317억 원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2015.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1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동기는 ‘안전성 및 가족건강’이 8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는 1.5%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중복선택 시 안전성은 95.5%, 영양가는 42.5%, 환경보호는 35% 수준을 보이고 있다.⁴⁾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소비실태와 전망” 2015

2015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이쿱 조합원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조합원의 94.5%가 친환경농산물 등 안전한 먹을거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입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공정무역 등 윤리적 소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1.7%, 환경을 살리는 환경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0.8%로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⁵⁾

조사결과를 통해 보듯이 국내 친환경식품 소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로 볼 수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인증품 구매시 환경보호와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인증품 구매사유는 EU의 경우 환경보호가 83%, GMO기피가 81%, 지역 제철음식 소비 78%로 나타남(중복선택).)

세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이나 웰빙, 건강, 환경에 대한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어 농업이 단순히 식품을 생산하는 이상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EU 등을 중심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도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기식품 시장의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국내 친환경 시장의 위험요인

가. 증가가 예상되는 유기식품의 수입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전체 식품수입 중 유기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금액기준은 1% 이하 수준이다.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건수는 7.5% 감소한 반면, 물량은 0.3%, 수입금액은 1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단위: 천 건, 천 톤, 천 달러					
	수입식품			수입유기식품		
	건수	물량	금액	건수	물량	금액
2009	255	11,302	8,434,081	3.7(1.5%)	21(0.2%)	39,920(0.5%)
2010	294	12,906	10,335,539	4.1(1.4%)	26(0.2%)	49,73(0.5%)
2011	313	13,471	13,195,077	4.0(1.3%)	27(0.2%)	59,249(0.4%)
2012	326	13,757	14,370,106	2.3(0.7%)	22(0.2%)	43,707(0.3%)
2013	353	13,645	14,690,746	2.4(0.7%)	21(0.2%)	54,040(0.4%)

주: ()는 전체 수입식품 중 유기농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5)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5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조사”

2014년도 부터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의 유기인증을 국내에서 동등하게 인정하는 동등성 규정이 유기가공식품에 한해 도입되어 유기식품의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동등성 인정이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의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자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2014년 7월 미국을 시작으로 2015년 2월 EU 등과 협약을 통한 동등성 인정을 발효하였다. 유기가공식품의 수입이 본격화 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유기식품은 외국 유기식품과의 경쟁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중국과는 한·중 FTA가 체결되었다. 중국의 경우 유기농식품 가격이 관행 농식품의 3~10배 수준으로 소비가 많지 않아 유기농식품 상당량을 수출위주의 전략상품으로 육성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 발전에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친환경인증의 신뢰문제

1997년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 및 이후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친환경농산물의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후 계속된 친환경인증의 확대정책은 최근에 이르러 인증의 부실로 인한 신뢰하락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의 연도별 인증농가의 행정처분 현황과 2014년 인증기관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해가 갈수록 부실인증이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증기관 행정처분 건수>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증기관수	30	37	49	57	68	73	78	76	76
인증기관 행정처분 건수	-	-	5	1	5	10	14	14	28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의 행정처분 현황>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행정처분 농가	1,936	2,977	8,773	5,806	5,835	6,776

<연도별 고발 및 형사입건 현황>

◦(' 10) 111건 → (' 11) 97건 → (' 12) 87건 → (' 13) 80건 → (' 14) 99건

친환경 부실인증의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들이 있다.

- 재배가 불가능한 창고, 식당, 정원 등을 현장 확인하지 않고 인증
- 신청 품목, 면적, 생산계획량 등에 대한 평가 및 현장 확인 않고 신청내역 그대로 심사 보고서 작성(재배 품목, 생산계획량, 면적 등 불일치)
- 영농일지 미기록, 제조제 사용 등을 확인하고도 인증취소 않고, 인증포기 처리
- 심사에 입회하지 않은 심사원이 심사보고서 작성 또는 서명
-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청인 단독 채취한 시료의 검사성적서를 인정
- 농약 사용 등으로 인증이 취소중인 필지를 인증

또한 현재의 인증제도는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 안심의 농산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2014년 기준 인증농산물이 하루 평균 18.5명이 행정처분이 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인증 취소의 내용에는 농약의 직접 살포, 수입 또는 일반농산물 혼입 등 고질적인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증 취소 농산물이 소비자가 구입하기 전에 사전에 적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소비를 한 이후에도 그러한 사실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인증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3) 행정절차 중심의 인증평가

유기농업이란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 위한 토양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작물이 문제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병해충의 밀도를 줄일 수 있는 물리적, 생물학적 조치 등이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생물의 종 다양성, 유기체의 상호의존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농장 외부자재 투입의 의존성을 낮추어 농업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생태계 전체를 완전하게 관리하는 총체적 생산관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라면 토양관리를 비롯해 물리, 생물학적 방제를 통한 선제적 조치를 먼저 실시하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외부투입자재를 이용하여 추가 방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친환경 인증 농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을 선행하지 않고 구입자재에만 의존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고, 현재의 친환경인증은 구입자재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평가자인 인증기관의 입장에서 인증의 적부 여부를 판단하기 쉽고, 이후 행

정적 절차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맞물려 생산자도 구입자재를 이용할 경우, 자재를 만드는 과정과 자재의 적합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노고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점차 구입자재에 의존하여 영농을 운영하게 된다.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업자재 또한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현재 1,300종 이상의 유기농업자재들이 수많은 업체를 통해서 만들어 지고 있다. 다수의 업체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좋은 자재를 판매하여 이윤을 얻으려고 하겠지만, 이 중 일부 업체들은 원재료 함량을 낮추어 비용을 낮추거나, 부적합한 화학합성물질을 첨가하여 효과를 높여 판매량을 늘리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있는 업체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로 매년 많은 종류의 자재들이 목록공시 취소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재들은 효과도 좋지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현실이 유기농업의 본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4) 안전성과 결과 중심의 인증관리

친환경인증의 주된 목적은 환경보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과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농약의 미 투입에 따른 식품안전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지나치게 식품안전과 농약의 검출이라는 결과 중심의 접근은 인증의 평가 방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각종 검사결과로만 인증의 적부가 평가되고, 농가의 유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에 비해 상호 신뢰가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분석결과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분석결과로만 인증의 적부를 판정하는 방식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농가의 운영방식, 생산자의 자질, 물리적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농가의 생산과정과 시스템을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는 생산자의 노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5. 유기에 대한 국제적인 개념

우리나라는 타 국가와 비교해 비교적 이른 1997년부터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실제 제도의 발전은 빠르지 않았으며 생산현장의 유기농업 기반은 아직 부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기식품의 확대와 인증의 신뢰를 위협하는 요인들은 국내 유기농업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유기농업의 개념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인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 모델이 필요하다.

올바른 인증을 위해서는 유기에 대한 국제적인 개념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각국의 주요기관 및 단체에서 정의하는 유기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 지속가능성, 순환, 생태계의 보존 등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 유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코덱스(CODEX) 가이드라인에서는 생물의 다양성, 생물학적 순환,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 촉진 등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강화시키는 총체적 생산관리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서는 유기농업을 “토양과 환경과 사람의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방식 이어야 하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기농업은 외부자원의 활용보다 생태계, 생물다양성, 그리고 지역 순환 생산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통을 존중하고 혁신과 환경과 공유된 과학, 공정한 관계, 양질의 삶을 모두 포함한다.

미국연방정부 유기농프로그램(USDA-NOP)에서 정의하는 유기(organic)는 기준(CFR Part 205-National Organic Program)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을 뜻하며, 유기생산은 현장별로 특수한 여건에 맞춰 경작 관행, 생물학적, 그리고 기계적 관행을 채택함으로써 자원의 재 활용을 촉진하며 생태 균형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에 의거 관리되는 생산체계를 뜻한다. 미국은 유기농프로그램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준이 식품의 안전 및 영양에 대하여 다루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 정의하는 유기생산(Organic Production)이란, 자연을 적절히 활용하고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 자원의 보존, 동물의 복지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설명한다.

일본의 JAS의 경우 유기생산은 재배방법은 가능하면 천연자원을 활용하고, 합성화학물질과 화학비료의 사용은 피하고, 농산물의 수확방법은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의 목적을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

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유기(Organic)의 정의를 “제 19조 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과정” 으로 정의하고 있다.

각 나라와 기관 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순환, 생태계 보전 등을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아이쿱인증의 방향 및 차별성

가. 아이쿱인증 추진내역

아이쿱인증은 2011년 12월 아이쿱인증(구 소비자독자인증)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2년 심의위원회와 기준위원회를 구성하여 그해 12월 1호 인증을 승인하였다.

이후 2013년 아이쿱인증 선포식을 통해 조합원에게 아이쿱인증 진행에 대해 알리고 본격적으로 아이쿱인증 확대를 진행해 나간 결과 2015년 전체 계약생산농가 1,640명중 40.2%인 660명을 인증하였다.

[표] 2015년 아이쿱인증 승인현황

구분	AAA		AA		A		A(꺾농약)		합계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합계	15	411	21	112	14	54	22	83	72	660

[표] 2015년 아이쿱인증 품목별 승인현황

품목	합계	AAA	AA	A, A(꺾)
과일	155	7	21	127
주잡곡	360	347	13	
채소	68	56	2	10
축산	77	1	76	

나. 아이쿱인증의 방향

iCOOP생협은 철저한 물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의 원칙을 운영의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듯 시장의 일반 상품과는 차별적인 iCOOP생협의 물품은 친환경 인증제도가 안고 있는 신뢰의 문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법적 인증제도가 안고 있는 한국 농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또한 극복하여 iCOOP생협이 견지해 온 자연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 환경을 만들어 농업의 지속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안전성 중심의 친환경인증은 진정한 유기농업을 추구하는 것이 어렵다. 퇴비를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퇴비 재료인 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게 되고, 유기사료를 수입하게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형 유기농업으로 발전해가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iCOOP생협에서는 아이쿱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성 뿐 만 아니라, 유기농의 본래 의미인 순환성(경.축 순환 등), 지속가능성(구입자재 최소화 등), 생물다양성(재배지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 발전) 그리고 신뢰성(기록 등)을 평가하는 인증기준을 만들고 생산과정의 신뢰 확보, 유통과정 혼입 방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유기농업 실현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아이쿱인증 제도를 만들어 가야한다.

아이쿱인증의 목표는

첫째, 기존 인증과 차별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농업생산의 기본 법칙인 생명이 있는 것들의 상호 유기적 순환을 기본으로 하여 순환성,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신뢰성 그리고 안전성 등을 고루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을 지향한다.

셋째, 생산자 주도성을 높이고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연순환형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다. 아이쿱인증의 차별성

아이쿱인증은 유기농업의 핵심인 토양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자가 생산된 양질의 퇴비를 이용한 토양관리를 통해 유기농업의 기본이 충실이 이행되는지를 평가하고 경축순환농법을 통한 자연순환형 농업을 권장한다.

외부투입자재를 최소화하고, 경운방식 및 윤작 등을 현실에 맞게 평가하여 토양의 지력을 살리는 영농운영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농업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인 유기물함량 평가와 함께 유기농업 기술을 높일 수 있는 시범포 운영, 단체 활동을 통한 유기농업 확대 등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생산자의 활동을 권장하고, 지하수 사 용을 지양하고, 비산방지를 포함한 농장주변 환경관리, 생물다양성조사를 통한 활동도 평가요소로 작용한다.

유기농업의 핵심인 지속가능성과 순환성 생물다양성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3번 검사 시스템, 출하 전 농산물의 100% 잔류농약검사, 정기적인 토양잔류농약검사를 통한 오염여부 확인 등을 확인하는 아이쿱의 검증시스템으로 보다 강화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기록관리 및 재배/수확/저장 과정에서의 구분관리 및 자재관리 평가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아이쿱인증은 인증으로서의 역할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다. 인증물품의 검출이나 혼입 등 중요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공급을 중단하고 사고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한 후 이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리콜 등 사고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등 인증물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iCOOP생협은 아이쿱인증을 통해 한국 유기농업 발전과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환경을 만들어 생산자에게는 자부심을, 소비자에게는 믿음을,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안전한 먹을 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나온 과정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이상.

아이쿱인증의 성과와 과제

이선경(iCOOP인증센터 회장)

1.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중심의 인증평가를 위해서는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인증센터와의 소통이 중요

2015년 연구소에서 발표한 ‘아이쿱 조합원 의식조사’에 따르면, 생협 가입동기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꼽는 응답자가 95%를 차지했다. 조합원들의 물품안전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물품구매 동기로 안전성을 꼽는 것은 당연하지만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순환성도 소비에 중요한 가치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아이쿱 조합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자의 대부분이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는 가장 큰 이유로 생산물의 안전성을 꼽는 반면 유럽과 미국의 경우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비중이 높다. 한국내 이러한 소비자의 바램은 결과중심의 인증평가가 정착되게 한 바탕이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생산을 바라봐 왔고 생산물의 안전성이 노력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친환경농업을 바라봐 왔다면 이제는 친환경농업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많은 가치들이 있다.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약이나 제초제 등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가치를 조명하여 생산과정에서의 노력이 잘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소통을 통해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생산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 생산물이 아닌 농장에도 있음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쿱 인증교육을 받은 조합원들은 아이쿱 인증이 다른 인증기관과 달리 농업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소비자로서 인증기관에 신뢰를 보내는 계기가 된다.

2. 아이쿱인증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아이쿱인증은 안전하다는 것 뿐 아니라 농업의 다양한 가치들을 평가기준에 담아서 평가하고 있다. 아이쿱인증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이쿱인증을 받은 물품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를 조합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조합원들이 느끼는 아이쿱인증은 어렵고 추상적이고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인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쉽게 알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안전하다는 가치에 집중하게 된다.

아이쿱인증의 성과는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에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식품들과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조합원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이는 아이쿱인증이 새로운 인증으로서의 가치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알려 내야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을 현재까지와 같이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물품을 통해 쉽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아이쿱이 추구하는 가치는 물품에 담기게 된다. 물품은 아이쿱 정책의 최종 결정체이다. 물품을 통해서 아이쿱인증을 풀어나가는 노력과 활동이 되지 않으면, 아이쿱인증의 성과는 줄어 들 수밖에 없다. 물품으로 조합원과 소통하려는 지역조합의 노력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아이쿱은 장기적으로 아이쿱인증만을 단독으로 표시해 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의 낮은 인지도는 단독표시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조합원들이 쉽고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친환경인증표시와 병행해서 표시할 수밖에 없고 이는 조합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작년부터 아이쿱인증 홍보단이 결성되어 조합원에게 아이쿱인증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조합 규모가 커지고 대면교육이 힘든 상황에도 지역조합별로 인증교육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쉬운 것은 작년 한해 전체 조합원 23만 명 대비 아이쿱인증교육을 받은 조합원은 1,500명에 불과하다. 조합원 수 대비 약 1%가 채 안되는 수치이다. 대면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장을 통한 영상자료, 홍보물, 이미지 광고 등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쿱 인증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아이쿱인증에 대한 생산자의 주도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

아이쿱인증의 목표는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주도성을 높이고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연순환형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목표도 함께 가지고 있다.

생산자 주도성을 높여 자연순환형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생산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도성이라는 것은 농장의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산자 스스로 찾아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생산자들에게 스스로 바뀌나가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생산자가 아이쿱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퇴비를 만들어서 이용하거나, 생물의 다양성을 살피는 노력 등 생산자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정착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산자들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제도 개선과제

유병덕(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1. 유기 식품 정의의 불명확

- A. 국제기준
- B. 유기농업은 생물다양성, 생물학적 순환, 토양의 생물학적 활성화를 통해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증진 강화시키는 총체적 생산관리 체계(CAC GL 32)
- C.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정의⁶⁾
- D. "유기"[Organic]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 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 E. 식품안전의 개념과 혼동
- F. 식품안전(food safety)은 1960년대 미국에서 식품의 사고를 방지하여 노동력의 손실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 G.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의 개념과는 다름
- H.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개념을 국제 기준과 동등한 개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식품안전이 아니라 농업생태계의 건강성을 바탕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2. 인증 종류의 혼동

- A. 인증 스킴(scheme)은 크게 시스템 인증과 제품 등의 인증으로 구분
- B. 제품 등의 인증은 다시 제품 인증, 프로세스 인증, 서비스 인증으로 분류

표 1 인증의 성격에 따른 분류

인증 종류		예시	특징
시스템 인증		HACCP, ISO, GAP, GMP, FSSC	운영체계에 대한 인증 병행생산 불가 로고 사용 불가
제품 등의 인증 ⁷⁾	제품 인증	KS, Q	생산품에 대한 인증 병행생산 가능 로고 사용을 통해 비인증품과 구분
	프로세스 인증	유기, 친환경, FSC, MSC	
	서비스 인증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시설관리인증, 휴양콘도미니엄, 차량수리 및 견인서비스 인증	

6)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 제3항

7) KS Q ISO/IEC 17065:2014의 3.4, 3.5, 및 3.6

- C. 유기 및 친환경 인증은 프로세스 인증임⁸⁾에도 불구하고, 인증 기준에는 제품 인증에 적합한 기준들이 적용됨
 - i. 생산물의 잔류농약 기준
 - ii. 수질 기준
 - iii. 토양의 잔류농약 기준
 - iv. GMO 검출 기준
- D. 결과 중심의 기준을 적용할 때의 문제
 - i. 생산자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적용하여 유기 생산자가 관행생산자로 유턴하는 사례 발생
 - ii. 악덕 생산자는 최종 제품에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농약을 사용
 - iii. 생물다양성, 자원의 순환, 토양환경 개선의 유기농 본래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상업화된 외부 자원에 의존하여 유기농업의 관행농업화. 예컨대, 유기농가는 농업자원 순환의 센터인 퇴비장을 없애고 대량으로 수입된 유박을 거름으로 사용하여 토양의 경화 및 산성화를 촉진
- E. 유기 인증은 프로세스 인증으로 분류(유럽연합 보고서)
- F. ISO 17065에서 프로세스의 개념을 정의
- G.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생산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유기적 품질을 관리

3. 위험관리 개념의 부재

- A.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를 기만행위와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 또는 탐정 업무로 보는 관점을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업무로 개념 전환이 필요
- B. 부적합사항이 발생하여도 표시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정책은 생산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박탈하고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한 의지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음
- C. 잠재적 부적합사항(potential non-conformity)을 인증부적격의 사유로 간주하는 현행 절차를 전면 재검토 필요
부적합사항을 위반사항으로 보지 않고, 적극적인 소통과 개선 대상으로 보아야 함

8) EUROPEAN COURT OF AUDITORS (2012). AUDIT OF THE CONTROL SYSTEM GOVERNING THE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AND IMPORTS OF ORGANIC PRODUCTS

"The control system for organic products as set out in the EU regulations aims at guaranteeing the production processes but not the organic character of the products themselves. This is because there is no scientific way to determine whether a product is organic or not."

- D. 인증은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 서비스이지 위반자를 고발하는 사법 제도가 아님
- E. 심사 및 평가를 통하여 의뢰자의 관리 시스템이 유지 및 개선되고 있음을 인증 정보를 통해 시장에서 보증해 주는 서비스임(guarantee system)

4. 전문 역량의 부족

- A. 인증 및 심사 서비스를 독립된 산업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농업계에 종속된 행정 업무로 바라보는 관점
친환경, 유기식품 등의 인증 외에도 다양한 농업 및 식품분야의 심사 및 인증 서비스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인증기관이 희박함
수출을 위한 USDA NOP, EU Organic, GLOBALG.A.P., FSSC, FSC, MSC, ASC, BRC, HACCP 등 농업 및 식품 분야와 에너지, 섬유, 건축 등 타 산업분야의 인증을 제공하여 독립된 산업분야로서 전문성을 갖추려는 시도가 필요
- B. 심사 및 인증 서비스 고유의 전문성과 국제 사회에서의 품질 관리론, 평가방법론을 이해하는 인증기관이 희박함
- C.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인정기관은 인정기관의 국제기준 ISO 17011에 대한 이해와 개선 검토가 미약함
- D. 인증기관은 경영 실태가 영세하며, 국가 인정기관의 행정감사식 관리정책에 순응하여 인증기관의 국제기준 ISO 17065에 대한 이해와 개선 의지가 미약함
심사원은 인증기관에 종속되어 저가인증 및 실적향상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과도한 업무와 시험분석 편향의 심사방법론으로 전문적 기량을 높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아이쿱인증, 어떻게 가야 하는가?

조성규(사회적협동조합 아이쿱생산자회 회장)

1. 왜 미국, 유럽은 유기농업 시장이 성장하는데 아시아는 축소되고 있을까?

- 유기농의 역사라고 생각되지만, 그 내용은 유기농업의 농사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그 중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력 향상을 중심으로 하면서 효과적인 방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곧 유기농업의 생산성에서 핵심이라고 본다면, 미국과 유럽은 그러한 농사체계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2015년 세계유기농업엑스포(괴산) 포럼 자료 “EU 2030 비전”을 보면 이제 유기농업이 “유기” 농업을 넘어서서 “농업”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본래 농업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는 유기농업이 농업의 본류로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근거는 바로 생산에 있다. 관행농업과 비교해서 유기농업이 결코 뒤쳐지지 않을 자신감...

- 그런데 우리의 유기농업, 친환경농업의 실정을 보면 화학비료,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것(안전성)이 중심 아닌가? 이것만으로는 유기농업의 생산성을 담보하기 힘들고 유기농업이 지속이 어렵다. 지력을 개선하는 것과는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퇴비’라고 하지만 그것이 발효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다 토양을 개선하는 역할로서 퇴비를 말하는지 양분으로서의 비료를 말하는 것인지도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지력과 양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그러하다 보니 ‘등록된 자재’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과 맞물려 대다수 농가들이 농사의 기본을 생각하기보다는 지원받는 자재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초기 어렵사리 개선되어 오던 지력이 점차 악화되어갔던 것이 아닌가. 그 결과가 상징적으로 KBS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한다.

- 우리의 경우 유기농산물 생산량이 12년까지는 증가하다가 13년부터 감소하고 있음을 자료에서 볼 수 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기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유기농가가 줄어들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근본 원인은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까? 유기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 포기하는 농가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원래 유기농업은 초기에 어려움을 겪지만 점차 안정화되어 관행농의 생산성에 가까워지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왜 점차 생산량이 줄어들고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을까? 바로 생산성

저하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그런 연유로 사고가 늘어나고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 농촌경제연구원의 시장전망을 보면 2017년부터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6년부터 시작되는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의 내용 무엇인지 확인해보니 이러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2. 유기농업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

- 단순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넘어서 윤리적 생산으로 가야 한다. 외부(외국)에서 들어오는 유기질 비료인 유박이나, 충방제를 위한 식물추출물(천연독성물질)은 원론적으로 보면 비자립적이다. 유기농업은 기본적으로 자립성을 지향해야 한다.

- 또한 유럽과 미국의 경우처럼 안전한 먹거리를 넘어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찾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우리의 친환경유기농업에서는 자연의 천적 활용이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그 대신 외국에서 수입한 원료를 사용해하지만 그 방제효과 역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로인해 농가들의 충 피해는 어마어마해서 유기농사 못 해먹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다. 아이쿱생산자회에서는 최근 자연 속에 서식하는 천적으로 활용하는 방제방법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 시범농가에서는 그 효과를 보고 있다.

-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농사를 안정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을 보호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어필할 스토리가 만들어짐으로써 판매도 유리해지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 안전성 중심에서 안심과 환경, 지속가능성 등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방향전환은 생산이 안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생산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농사의 기본, 즉 지력 향상을 기반으로 하여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체계가 세워져야 한다.

- 아이쿱인증기준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법적인 친환경인증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심사원의 높은 자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3. 아이쿱인증의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

- 아이쿱인증은 그동안 신뢰를 쌓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결과를 낳았다. 그것은 그간에 발생한 타 기관의 각종 사고와 부실인증에 비춰 우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칫 행정절차(인증기준의 형식적 적용) 중심으로 인증이 이루어지면서 유기농업의 현장에 맞는 적절한 농사방법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소극적으로 되는 측

면이 있었다. 이는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 혼입처럼 확실한 인증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명확히 검증해내는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제대로 된 자재(발효퇴비, 발효비료 등)를 사용하는 농가들에게는 유기기준에 맞는 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점이 있다. 그 결과 정부의 자재지원 정책에 맞물려 농가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유기 농사법 보다는 인증심사 받는데 쉬운 방법(유박, 축분퇴비 등)을 택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었다.

- 앞에서 지적인 생산의 안정화와 이에 기반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증의 심사방법이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증의 기준과 방법은 생산의 조건을 제약하는 것이기에 인증심사 과정에서 각 농장의 조건 속에서 인증기준에 맞추면서도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농사법들을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인증기준을 속이지 않게 되고 신뢰를 높여낼 수 있게 된다. 만일 인증이 농사를 과도하게 제약하게 되면 결국 유기농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제 심사원들도 제대로 된 유기농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유기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지함으로써 농가들이 올바른 농사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아이쿱포럼

회차	주 제	일정
제1회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형성을 위한 생협의 과제	2006.08.29
제2회	한국 사회의 식문화 현황과 문제점 - 식육법의 필요에 대하여	2006.11.03
제3회	생협에서 공정무역이 갖는 의미와 방향	2006.12.01
제4회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의 사례와 향후 과제	2007.02.13
제5회	우리 밀 생산과 소비 운동의 성과와 이후 과제	2007.06.08
제6회	새로운 대안운동으로써의 사회적 경제와 생협운동	2007.07.07
제7회	iCOOP생협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	2007.12.20
제8회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의 한국 경제와 생협 운동의 전망	2008.07.23
제9회	광우병 촛불 정국에서 생활 운동체인 iCOOP생협과 이후 과제	2008.09.30
제10회	람사르총회와 논습지 보전의 필요성과 과제 전망	2008.10.21
제11회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9.07.09
제12회	생협의 노동과 임금	2009.10.28
제13회	통화 운동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2010.04.01
제14회	생협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2010.05.25
제15회	생협에서 공제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방향	2010.07.13
제16회	2009년 iCOOP생협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 결과 보고	2010.09.07
제17회	유통인증 5년에 대한 평가	2010.10.15
제18회	iCOOP생협 활동을 위한 이론 정리를 위한 토론	2010.12.01
제19회	iCOOP 직원복지의 바람직한 방향	2011.03.08
제20회	조합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모색	2011.03.31
제21회	조합원 활동가 교육 현황, 평가	2011.04.19

회차	주 제	일정
제22회	공정무역 5년의 성과와 과제	2011.05.11
제23회	iCOOP생협의 새로운 생협운동 정책에 대한 평가	2011.12.15
제24회	유럽생협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2012.07.05
제25회	아이쿱생협 경험연구 - 윤리적 소비와 지역생협 이사회 분석	2012.10.25
제26회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저자에게서 듣는 일본생협운동의 전망	2012.09.18
제27회	한국 사회의 물 공공성과 식수 안전성을 생각해 보다	2012.12.11
제28회	농지가격이 친환경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2013.02.06
제29회	iCOOP생협의 공정무역 현황과 방향	2013.04.25
제30회	한일 생협의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조사 결과발표	2013.06.12
제31회	(공동포럼) 윤리적 소비와 시민사회	2013.09.26
제32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2013.11.08
제33회	윤리적 생산을 위한 iCOOP생협 생산자들의 활동과 비전	2014.03.12
제34회	파고르 가전 파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4.7.02
제35회	아이쿱생협 생산자 회원의 특성	2014.09.23
제36회	(GSEF2014) 협동조합 제6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의미 와 사례	2014.11.19
제37회	(공동포럼) 칼 폴라니와 21세기 경제	2015.04.17
제38회	'협동조합 사이 협동'의 목표와 방도를 찾아	2015.07.01
제39회	『2015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 사. 2015년 아이쿱생산자회원 실태 및 의식조사』	2015.11.25

10th

초대합니다.

2006년 5월 25일에 태어나 10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생협과 더불어 협동조합이 낯설지 않게 들립니다.

협동조합 지식의 숲을 이루는 또 다른 10년을 향한 연구동 (동)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기념 행사에 선생님을 모십니다.

이사장 이정주

일시: 2016년 5월 25일(수) 오후 1시 ~ 6시
장소: 여성플라자 아트홀 & 국제회의장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주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행사장 약도



행사일정

1부	13:00-16:30	기념심포지엄 "좋은 동네에서 살자: 지역사회의 내일을 만드는 협동조합"	아트홀
		1. 사례연구 발표 - 조합원이 그려가는 생활정치: 진주아이쿱생협의 실험 - 고립된 섬들에 다리 놓기: 대구행복·포항아이쿱생협의 활동풍경 - 생협매장사업은 지역사회에 무엇을 남기나: 대전지역 아이쿱생협의 사업특성 - 안심을 엮어내는 실행공동체: 코프 아이치의 주민복지 활동 2. 대담 신동욱_한양대학교국제학대학원, 허준기_고려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황지에_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정화영_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김창진_성공회대학교, 박중현_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염관희_성공회대학교, 김경희_육목아이쿱생협, 김형미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부	16:30-17:00	기념식	진행 김찬호_사회학자 아트홀
	17:00-18:00	축하만찬	국제회의장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간행물의 역사 전시, 심포지엄 자료집 증정. * 양천아이쿱생협 조합원 소모임 '보리공방' 제작 수제 서류가방 증정 (2부 참가자에 한함)

문의 및 참가신청 02-2060-1373
icoop_institute@daum.net

협동조합 연구자 발굴을 위한 제3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

1. 공모전의 목적

-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접근성 강화
- 현장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협동조합 연구로 발전
- 협동조합 연구자 발굴 및 지원

2. 공모내용 : 협동조합 관련 연구 논문(홈페이지 참조)

3. 응모자격

- 누구나(2인 이내 공동응모 가능)

4. 응모기간(우체국 소인 기준)

- 1차 프로포잘 접수 : 2016년 6월 17일(금)
- 최종 논문 접수 : 2016년 9월 30일(금)

5. 시상내역 : 총 5편, 1,200만 원

- 대상(1편) : 아이쿱협동조합상 및 상금 500만 원
- 금상(1편) : 아이쿱협동조합상 및 상금 300만 원
- 은상(1편) : 아이쿱협동조합상 및 상금 200만 원
- 동상(2편) : 아이쿱협동조합상 및 상금 100만 원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공모전 담당자, 02-2060-1379 | icoop-institute@hanmail.net | www.icoop.re.kr

행
이
연구 동 (動)

2016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0주년

icoop